민주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국힘 "이재명 구하기" 강력 반발

김재원 "李 쥐구멍 만들어주는 것"
한동훈 "李 구하려 나라 개판으로"
주진우 "1호 수혜자 李… 재명무죄"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데 대해 22일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일을 나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이재명 피고인에게 쥐구멍을 만들어 탈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적 기업 활동을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듯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 면소 관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조치"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 활동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를 용납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현재 재판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는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형법을 개정하더라도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행위 당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법 취지"라며 "이재명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재명 뚤마니 노릇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님, 이 점을 깊이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가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 의지를 드러낸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짚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해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애 (배임죄 유죄 관결이 확실한)이 대통령을 '면소 관결'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배임죄를 없애 (기업내 불법 행위를 처벌 못 하게 되면)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 된다"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관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다 날아간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을 위하려면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법사위 아수라장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에 대한 철거요청을 거부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나 의원 퇴장 조치 등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장동혁 "정청래, 이재명·김어준 똘마니 자처"

鄭 "張, 尹 똘마니… 오물 냄새나니 입 닦아라"

민주-국힘 당 대표 막말 공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똘마니' 등 막말을 동원한 공방전으로 기 싸움을 벌였다.

당 대표실에 '내란세력' 문구와 함께 장 대표 초상화를 걸어 두고 연일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던 정 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집회 현장에서 장 대표가 자신을 "이재명과 김어준 똘마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장 대표가 집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발언을 페이스북에 옮기면서 "국민의힘의 장와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와 투정'"이라며 "가출한 불량배들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국민의힘과 장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장동혁,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시냐"라고 받아쳤던 정 대표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장동혁, 그 입 다물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고도 정 대표는 45분 뒤 다시 "장동혁, 그 입 다물라.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냐"라면서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따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라고 거친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앞서 집회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며 "반헌법적인 정치테러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다.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며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한미 무역협상을 비판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결국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정녕 대한민국은 안녕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위대한 국민이 다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멈춰 있는 이재명의 다섯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며 "불의한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李-트럼프 회담 없어… 국힘 "관세 협상 새빨간 거짓말" 맹폭

장동혁 "한미 관세 협상 완전히 실패… 기업 속 탄다"
송언석 "담당자 경질 필요… 국민에 낱낱이 털어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한 이후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했는데 최근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만약에 합의문에 서명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의 완전 실패를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었고 부품업계에는 그 불안이 더하다"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동차 부품 중 철강으로 분류되는 것은 관세가 50%"라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도대체 협상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대통령과 대통령실 발언 자체가 상충된다"며 "이 대통령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대통령실 담당자 및 관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한 관세 협상(내용)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국민 앞에 털어놓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국민에 고백해야 한다"며 "상황이 어렵다고 어설픈 반미 선동 및 '반 트럼프 선동'으로 지지율을 관리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6일까지 3박5일간의 일정으로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세계무대 복귀'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후엔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큰 관심을 보였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24일에는 한국 대통령 최초로 'AI(인공지능)와 국제 평화·안보' 의제로 첨단 기술이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체코 등의 정상회담과 미 의회 인사 접견,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정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실장은 "근래 회담을 한 바 있고, 10월에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상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관세 협상 조속히 해결… 통화스와프 없이 美 요구 수용땐 금융위기"

李,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 간)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로, 이는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기도 하다"며 "실무급 협의에서의 제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양국 간 이견을 메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대답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포기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협맹 간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조지아주 근로자 감금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한국민들이 분노했고 대미 투자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관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나는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안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으로 22일 미국 뉴욕에 도착,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3박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건설안전특별법안' 보완 발의

문진석 "발주자 책임 명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공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기재부 등 상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발주자(공공·민간 공통)가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원청)가 발주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신설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법안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발주자의 안전자문사 선임은 의무규정으로 변경된다. 이는 발주자도 안전 관리의 책임자가 되는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은 현재 안을 유지하되, 1000억원의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을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1~2회에는 작은 비율을 부과하나, 위반 횟수가 증첩될수록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과징금을 우려하는 업계를 배려한 경감조치도 도입된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해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안전시설물을 시공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한 조항도 일부 수정된다.

안전시설물 시공이 하도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도급 시공을 인정하되, 관련 사고로 처벌시 원수급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발의법안에는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법률 시행시기는 일부 변동된다. 1년 후 시행은 유지하되, 50억원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2년 후 시행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TK신공항·미분양 아파트 해결 당 모든 역량 쏘겠다"

국민의힘, 대구商議 간담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22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TK 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핵심 과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의 민생경제부터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대형 사업까지 지희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 많은 것 같다"며 "특히 대구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TK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과도한 사업리스크로 인해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 지원과 관련 특별법 개정 등 실질적 해법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본 궤도에 오르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는 현재 대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대구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부동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주문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또한 대구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이 자리에서 TK 신공항 문제와 관련 "국가에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첨단의료와 같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대구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여당에 대항하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언론·사법 개혁,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불법성을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 앞에서 열린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장외집회다.

오는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지역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은 최종적으로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